

03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군·관이 함께 합니다

지자체 주도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추진부서 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과 032-8075-3081

개선배경



- 고양시의 약 48%, 127.4km²에 거주하는 약 22만 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토지가치 하락, 군 협의에 따른 인허가 처리 지연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특정 목적 개발 사업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아닌 기존 거주 중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사례를 발굴하고 해제(행정위탁)를 통해 규제 완화 추진
- 법령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해제 가능한 지역을 선별하여 국방부에 요구하는 형식을 취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로 타 시·군에서도 적용 가능

개선내용



개선전

- 고양시 전체 면적 중 약 48%(127.4km²)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 규제지역의 토지가치 하락,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 발생
- 통상 1개월 이상의 군협의 절차 소요



개선후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17.6km²) 및 행정위탁 협약 체결(18.6km²)
- 규제지역 내 원활한 재산권 행사 가능
- 군협의 기간의 획기적 단축 (1개월→1일)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 고양시·군부대 간담회 및 협의(시장·사단장 면담 등 실무협의 40여 회 개최)
 - 가능성이 높거나 수해도가 높은 지역 선정 작업부터 군부대 담당자를 참여시키는 등 군·관 협업체계 구축
 - 17.6km²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일부 지역(18.6km²)은 행정위탁 협약 체결
- 군부대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각종 행정 지원
 - 전국 최초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산프로그램(Q-GIS)을 구축하여 군부대에 보급
 - 군부대(군보 협의 담당)와 시(허가 담당)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효율적인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업무 매뉴얼 개선 및 서식 표준화

개선효과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약 7만 명이 직접적인 수해를 받게 됨.
- 토지 가치 약 12조6천억원 상승
 - 경기개발연구원 『군사시설 피해실태 연구(2008)』에서 제시한 '자산가치 손실 추정방법'적용
-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확보 및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개발 효과 기대
- 행정위탁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민원 접수시 통상 1개월이 걸렸던 군협의 기간이 1일로 획기적 단축
- 전산조치 프로그램 구축으로 민원처리담당자(군·관)가 군사시설보호구역현황을 즉시 확인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 사유재산권 행사 활성화 및 행정절차 처리기간 단축으로 군부대에 대한 인식 개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



최신기사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 등 협의 빨라진다

송고시간 | 2018-04-18 08:47

표준서식 만들어...필수 사항 명시·첨부서류 최소화

【고양=연합뉴스】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軍) 협의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 협의 표준서식'을 정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 협의 표준서식' (고양=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 협의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 협의 표준서식'을 정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을 시와 군이 표준 서식을 만드는 모습. 2018.4.18 [고양시 제공=연합뉴스] gsh@yna.co.kr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군·관이 함께 합니다



부 작성자 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과 조용주 031-8075-3081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각종 공공개발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군사규제 피해현실 기초조사와 군 전문가의 전략적 제안 등을 검토한 종합 논리를 개발해 주도적으로 군사규제를 혁신하고자 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17.6km²) 및 행정위탁(18.6km²), 군협의 서식 표준화 등의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군사규제 해제는 군 당국의 전유물이라는 것이 관례였기에, 우리시 주도로 군사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0여 회의 실무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의 권리 보호와 시민불편 개선이라는 최우선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군·관이 협력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사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군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각종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재준 시장님, 실·국·과장님, 실무진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완화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행안부, 경기도 주관 경진대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규제에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규제 개선에 지자체, 중앙부처, 정치권, 시민단체, 관련 단체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어내고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 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군사보호구역지정 해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만큼 고양시는 미래를 위한 도약에 앞장서는 평화경제특별시로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규제로 인해 권리행사를 제한 받았던 시민들을 위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